

네트워크 회의
-차별금지 회의

“코로나19, 사회적 낙인과 회복방안”

이완
[한국,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1. 코로나 19와 사회적 낙인

전염병 위기는 전 세계를 광풍처럼 휩쓸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한국사회는 방역과 안전이라는 이름아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겨울에 시작된 거대한 재난은 여름의 한가운데가 되었는데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고,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잊고 있는지,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무엇을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안전이라는 빌미로 애써 양보하거나 모른척 했던 것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래야 전염병으로 시작된 사회 모든 분야의 위기가 된 현재 상황을 온전히 탈출할 길이 보일 것이다.

현재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이다. 사회적인 낙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부족과 두려움에 기인하여, 사회적 재난에 책임을 지울 희생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와 결합한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개인과 집단들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피, 거부, 배제 그리고 혐오발언을 겪고 있다.

기존에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혐오와 차별은 재난상황을 맞아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고, 이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되었다. 바이러스가 인종, 국가, 지역, 소득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염병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한국사회 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도 역시나 가장 큰 고통을 받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큰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인 낙인마저 덧부쳐져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서 마저 배제되기도 했다.

2. 확산 경로를 따라 번진 사회적 낙인과 혐오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되자, 한국사회의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한 모습들이 선명히 가시화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는 확진자를 마치 고의로 범 죄를 저지른 사람 처럼 취급하고 과도한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조사한 연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고 한다.¹⁾

전염병 확산 초기였던 2020년 2월말 경, 경남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문자를 전 직원에게 보냈다가,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자 사과했다.²⁾ 이러한 현상은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 지역과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2월초, 충북의 한 지역에서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대만으로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요식업협회의 참여 음식점을 찾아내겠다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군부대 외부에 위치한 군인가족아파트에게 까지 배달을 거부하는 음식점과 마트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한 사람은 한 달 후 완치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이웃들의 달라진 태도와 손가락질에, 감염된 것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되어 자책하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³⁾ 코로나 19에 확진자나 접촉자들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고, 개개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 의식이 부족해서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이런 개개인에 대한 비난은 기존에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차별의식과 합쳐져, 확진자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질병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가 속한 집단과 지역은 기피대상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3. 혐오 차별과 연관된 코로나19 사회적 낙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집단이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 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구로와 가리봉동은 질병확산의 온상으로 취급되었다. 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그 시발점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29일 ‘해럴드경제’는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 약국에서 마스크는 품절 사태를 겪고 있지만, 정작 차이나타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로 넘어가 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며,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코로나 19와 연결시켜 확대 재생산했다.

1) YTN 뉴스, 2020. 8. 2. "감염된게 자랑이냐"...편견·차별에 두 번 우는 완치자

2) MBC 뉴스, 2020. 2. 29. 경남은행도... "코로나19 걸리면 엄중 문책"

3) YTN 뉴스, 2020. 8. 2. "감염된게 자랑이냐"...편견·차별에 두 번 우는 완치자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구로지역에서 중국인 및 중국동포 그리고 지역의 교육관계자들과 감염병위기와 혐오차별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구로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아이들 중 일부가 중국아이들과 급식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로 전화를 걸어, 중국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들은 아이들까지 이런 혐오를 겪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신천지와 관련해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는 심지어 “대구가 대구했네”라는 지역 혐오발언들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⁴⁾ 사회 곳곳에서 신천지 교인 색출활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후에는 고향이나 거주지가 대구라는 것만으로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울로 직장 면접을 가려 했던 대구지역 청년은 회사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으며, 대구 사람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음식점 안내문이 붙었고, 대구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병원에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했다.⁵⁾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240여만 명의 대구시민들은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당기간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폭풍과도 같던 몇 달여가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뀔 즈음 5월 7일 이태원 클럽에서의 감염병 확산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전염병과 연관되어 퍼져나갔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클럽에서 확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소수자들이 마치 고의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되었다. 직장에서 강제로 아우팅을 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후 자가격리를 했던 한 클럽 방문자는 회사로부터, ‘직원이 이태원 클럽 관련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회사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⁶⁾

이처럼, 이주민, 특정지역, 특정종교,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19의 확산 경로를 따라 이어졌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사회적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생겨났다가보다는, 기존에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전염성 질환을 매개로 가시화되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4.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어낸 사회적 낙인과 혐오

위기 상황 속에서 주류사회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평등

4) 쿠키뉴스, 대구시의 잇따른 탁상행정엔 빨난 누리꾼...“대구가 대구했네” 2020. 6. 10.

5)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좌담회 ‘코로나19 지역혐오의 성찰과 과제’ 2020. 7. 28.

6) 연합뉴스,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에 커진 혐오... 숨죽인 성소수자들’ 2020. 6. 8.

과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 감염병 위기의 혼란과 공포가 번지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만이 유일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긴 줄을 서야만 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만들어 일주일에 1인 2매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전염성 강한 감염병 위기에서 구성원의 일부를 방역물품 제공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역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된 재난지원금에서 대부분의 이주민과 난민이 제외되었다.

3월3일 대구시는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하지만, 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마스크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대구에서 태어나 49년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만 국적의 한 주민 또한 마스크를 한 장도 받을 수 없었다.⁷⁾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써, 세금과 방역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주민이었지만, 지원에서는 배제된 것이다.

이후 시작된 정부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에서도 이주민은 다시 배제되었다. 재난과 긴급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관자 역할을 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동안 정부의 고위 관료나 주요 정치인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등임금이나 대우가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던 평상시의 태도가 재난 상황을 맞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자, 건강보험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비자가 없는 이주민, 단기체류자 그리고 난민신청자와 같은 우리사회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배제의 경험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국가는 재난 속 긴급 구호 대상에서 사회 구성원 일부를 제외하며 배제의 논리를 공식화 및 정당화 시켰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에 외국이주민들을 포함해 누군가는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함께 살고 있지만 동등하지 않다는 사회적인 낙인을 만들어 냈다.

또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4인 가족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호주제 폐지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던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다시 소환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단시간에 모든 주민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다. 더욱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7) 오마이뉴스, "대구에서 49년 살았는데 외국인은 마스크 못 준다니..." 2020. 3. 3.

재난기본소득을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아, 세대주만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세대주가 남성인 상황에서, 남성 가장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권리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은, ‘가장 보통의 가족’의 형태를 정의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매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 곳곳의 다양성 실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시민의식 발현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회복

장기간 지속되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서 국가 단위의 총력적인 역할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었다. 사회현안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아니라, 국가만이 유일한 해결자이며 종결자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견,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상 축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는 ‘빛나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발현’이 있었다. 초기, 중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교민들의 격리 공간에서의 혼란으로 격리수용지의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중국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으로 이어져, 해외에서 들어온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대구에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호소에 많은 의료진이 자원해서 대구로 찾아갔다. 사람들은 격리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문앞으로 식료품을 배달해주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일시적으로 받지 않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지기도 했다. 대구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광주광역시도 대구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면서, 대구의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 마스크를 찾아가 나누었다. 국가에서 배제당한 이주민들을 위해 많은 이주민단체에 마스크 기부와 나눔 또한 이어졌다. 바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던 것이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더욱 가시화된 혐오와 차별에, 시민사회는 특정 지역, 종교, 소수 정체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는 이태원에서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혐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똑같은 위기 상황을 견디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배제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부천시와 안산시는 이주민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⁸⁾이후,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⁹⁾ 이처럼, 차별과 배제에 의한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상처는 정부의 더 강력하고 평등한 행정력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역할이 함께 수반되어야 회복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의 사회적 회복은, 확진자에 대한 신체 및 심리 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강화된 사회적 낙인과 이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이를 당한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위축, 공포 등 정서적 정신적인 피해를 동반한 복합적인 삶의 고통을 남긴다. 이는 코로나 19의 치료제 개발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단단한 방벽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 마음의 안전벨트는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서 자신을 항상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상시라면 하지 못했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 자신 또한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위기 경험을 통해 얻게 된,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집단적 경험이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깔려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성찰이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의 논의와 성찰을 통해, 우리 삶을 가로지르는 제도로써 정착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양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평등법과 같은 법제도 또한 필요하다.

다양한 정체성을 향한 공감능력 향상, 올바른 정보제공, 다양성과 인권존중 그리고 혐오차별의 배격은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불어,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안착시켜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발한 노력과 법제도를 통해, 코로나19보다 더한 위기상황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정의로운 행정력 또한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이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적 낙인을 걷어내고 진정한 사회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2020. 6. 11.

9) 연합뉴스, 서울시,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준다…총 300억원 예산 확보, 2020. 6. 30.